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3.1.27. _ Vol.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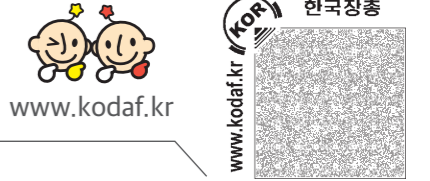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이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지역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찬길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2022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01 시·도 교육·복지 비교조사란?

■ 지역별 장애인복지·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마련

-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지역 간 경제력 차이는 지방세원의 편중을 야기했음
- 지역마다 상이한 복지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저조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차별을 야기함
-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와 지방간의 재정 격차,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등에서 지역별 차이로 인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수준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를 실시하고 있음
- 객관적인 지표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수준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함

■ 민선7기 지자체장 최종평가, 중앙 및 지자체 자료로 객관성 확보

-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4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17개 시·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 2022년 조사는 1년 수준을 비교하는 조사이므로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음
- 민선7기 임기 4년 차로 지자체장 종합평가를 위해 장애인교육 9개 지표, 장애인복지 35개 지표 총 44개 지표 종합조사를 실시하였음
- 장애인복지는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지자체 의견수렴과 연구진 논의를 통해 지표 개선이 이루어졌고, 제도 변경이나 판정이 모호한 지표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정확도 확보를 위해 수정되었음
- 객관적 자료 수집 후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구분하였음

표1 시·도 교육·복지 비교 조사 등급 구분 기준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 값의 평균 값 미만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 값의 평균 값 이상	지표별 최고 값과 전국 평균값의 평균 값 미만	지표별 최고 값과 전국 평균값의 평균 값 이상

• 2022년 평가 지표

- ▶ 복지분야(5개 영역, 35개 지표)
 - :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8개 지표,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7개 지표, 복지서비스 지원영역-8개 지표,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5개 지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7개 지표



▶ 교육분야(9개 지표)

: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 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학급당 특수 교육대상자 수, 장애인교육 1인당 예산액, 장애인고용률

02 지역별 교육·복지 수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1 장애인교육 수준 향상되었지만, 개선 필요한 부분 눈에 띄어

장애인교육수준 3년 연속 상승, 우수·분발 지역 간 격차는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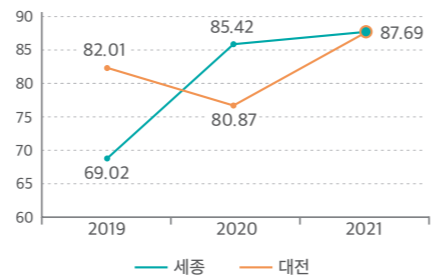
- 장애인교육 분야는 2019년 72.77점, 2020년 78.78점, 2021년 80.18점으로 조사되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3년 연속 전국 평균 점수가 상승하고 있어 지자체가 장애인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과 관심,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2 장애인 교육 분야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6)	보통(3)	양호(5)	우수(3)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북, 제주	서울, 강원, 경남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남

최하 74.40점 평균 80.18점 최고 87.6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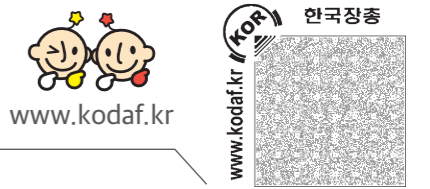
- 세종은 87.6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세종과 대전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으로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서울, 충북, 전북을 제외한 지역들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강원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지만, 지난 조사 대비 가장 큰 향상률을 보여 장애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 부산, 경기,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장애인교육 수준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수교육 예산액 수준, 특수 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장애인교원 고용률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2020년 34,640천원에서 2021년 34,424원으로 0.6%로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남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예산액이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어 특수교육 예산증액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됨
-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은 평균 24.34%(전체 14.16% / 유급 10.18%)로 조사되었음
- 전년 대비 5.1%가 하락한 수치이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남 10개 지역이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장 높은 대전의 경우 36.42%, 가장 낮은 경기는 15.54%로 2배 이상 배치율의 격차를 보였음



- 장애인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확보는 장애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구축을 위한 기본토대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의 분발이 요구됨
- 장애인교원 고용률 또한 5개 지역(상승4, 동일1)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년 조사 2.03% 대비 2.5% 하락한 1.98%로 장애인교원 고용률이 전체적으로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든 지역이 법정 의무 비율인 3.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청은 2년간 800억 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장애인이 적어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밝혔음



김은경, 김태주 기자, “교원 자격증 있는 장애인 적어” 800억 내고 속 끊는 교육청들 ©조선일보 2023-01-06

- 지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교육청이 적극적인 장애인교원 양성 환경구축을 추진해야함
- 본 비교조사를 통해 장애인교원 양성을 위한 환경구축의 계기로 삼고 장애인교원 고용률 향상과 교원 양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

2 장애인복지 지역 간 편차 감소했지만 수준은 크게 하락

장애인복지수준 지난 조사 대비 26.2% 하락

- 전국 장애인 복지분야 종합 평균 점수는 53.70점으로 지난 조사 68.19점에서 26.2%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주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대구와 경남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한 반면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남은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3 장애인 복지 분야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7)	보통(2)	양호(6)	우수(2)
부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강원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남	대전, 제주

최하 48.01점 평균 53.70점 최고 67.07점

- 대전과 제주는 우수 수준으로 장애인 생활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부산, 전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머물러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 하락·지역 간 격차 심화

-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은 지난 조사 63.71점 대비 11.0% 하락한 56.72점으로 나타났고 상위 지역과 하위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 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우수, 부산, 세종, 경기는 양호로 나타났고, 인천, 강원, 충북, 경북, 경남은 보통,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수준으로 나타났음



- 울산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하여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

• 2022년 평가 지표

▶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 총 8개 지표

■ 장애인예산과 행정력 감소,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수준 하락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지난 조사 35.55점에서 8.6% 하락한 32.51점으로 조사되었음
-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부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5개 지역뿐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강원, 전북, 경남은 3년 연속 상승했지만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은 3년 연속 하락하여 장애인예산 및 행정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3년 연속 하락한 지역 중 인천은 분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하여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도 울산, 전북, 경북,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하락해 지자체 예산 등 여성장애인 관련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2년 평가 지표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 7개 지표

③ 장애인 고용률 상승했지만, 불안한 장애인 고용

■ 17개 시도 모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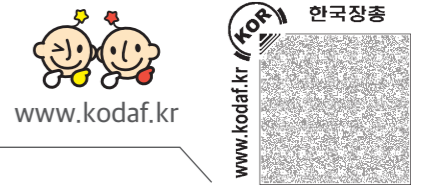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조사 3.24%에서 26.2% 상승한 4.09%로 조사되었음
- 전북은 3.55%에서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향상률과 고용률을 보였고, 부산, 광주, 강원은 우수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현황

분발(3)	보통(7)	양호(3)	우수(4)
서울, 울산,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제주	부산, 광주, 강원, 전북
최하 3.32%	평균 4.09%		최고 4.82%

■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도 소폭 상승했지만 일부 지역 분발 필요

-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전국 평균은 4.13%(최고 6.64%, 최하 2.72%)로 나타났고 지난 조사 3.97% 대비 4.0% 상승하였음
- 서울은 5.54%에서 27.1%가 상승한 6.64%로 조사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였음



- 대구도 지난 조사 대비 31.0%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으며 5.84% 고용률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반면 강원은 지난 조사 3.35% 고용률에서 2.72%로 하락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로 나타났음
-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하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지역은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하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강원, 경북은 분발 수준에 머물르고 있어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음

■ 고용은 장애인 삶에 중요한 요소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그리고 고용보장' 순으로 나타났음

표5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구분	결과 (단위: %)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	27.9
주거보장	7.4
고용보장	3.6
이동권 보장	1.5
보육·교육 보장	0.7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보장	1.4
장애인 인권보장	1.9
장애인 인식개선	1.5
장애인 건강관리	2.5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보장	0.3
재난안전관리	0.1
기타	0.3
없음	2.0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 고용은 장애인 소득보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장애인 소득보장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 또한 보장이 되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소득보장 욕구, 고용보장 욕구가 증대된 상황임
- 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인구의 60% 수준이고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인구보다 70%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1.8%로 경증의 절반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73.1%로 경증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6 2021년 장애인 고용률·비정규직 현황

	고용률	비정규직
전체인구	61.2%	38.4%
장애인구	34.6%	67.8%
경증	40.3%	66.4%
중증	66.4%	73.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종사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2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환경이 취약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현실임
- 장애인 고용률 상승과 더불어 고용형태도 개선되어야 진정한 장애인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고용공단 등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개선된 장애인 고용보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장애인 건강검진도 어려운 현실, 의료-주거 지역별 격차 심화

■ 보건의료센터·재활병원 운영 지역과 없는 지역 격차 심화

-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 수준은 장애인 의료여건 향상을 위한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예산 규모 차이로 다른 지표에 비해 큰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7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10)	보통(4)	양호(2)	우수(1)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강원, 경북	충남, 제주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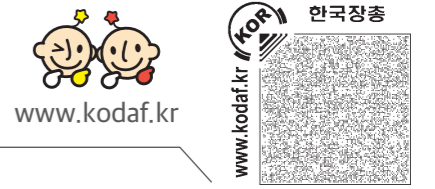
최하 8,121원 평균 383,658원 최고 3,183,845원

- 대전은 1인당 3,183,84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수준을 보였고, 가장 낮은 지역의 39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전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연계·지원 및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서비스 제공,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양호 수준으로 나타난 충남, 제주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의료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으로 나타났고 광주, 세종, 충북은 3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장애인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낮은 수준으로 조사된 지자체는 장애인 의료보장을 위한 센터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의료보장의 욕구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영역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보장 욕구는 소득보장에 이어 2번째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종교·연령·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은 건강검진,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비장애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년 간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70.4%로 2017년 조사 7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 검진 종류별로는 건강보험을 통한 검진이 74.9%, 지방자치단체 시행 검진이 19.4%, 본인 부담 검진이 4.3%로 조사되었음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검진 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해서(18.4%)’, ‘경제적인 이유(9.6%)’로 조사되어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의료기관이 3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정보를 얻기가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유치에 대한 지자체 관심 및 노력 필요



이슬기 기자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 지지부진" ©에이블뉴스 2022-07-21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22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19개소만 지정되며 2024년까지 연장함
- 2022년 6월 기준 지정된 19개소 중 9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10개소는 준비 등의 이유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립재활원에서는 2017년 건강검진을 받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X-ray 검사여부를 조사하였는데 924명 중 232명인 25%는 검사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부터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장애인친화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부족함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방의료원 35개소를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음
- 지방의료원 35개소 중 8곳만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상태로 나머지 27개소도 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지정이 필요함

-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의료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친화 의료기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운영을 통한 지역별 장애인 의료보장

-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 시행 병원 부족, 의료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유명제도?" 시행사업 3년간 0.1%만 참여 이용자 어디? ©더인디고2021-07-21

- 서울과 경기도 2곳만 50개 이상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제주도, 울산, 세종 등에는 1개의 의료기관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위 같은 문제들로 인해 지역별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차이는 더 큰 것으로 예상됨



이슬기 기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지 지지부진"
©에이블뉴스 2022-07-21

- 건강은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 있고 중요시하는 영역이며, 비장애인보다 의료기관 방문, 의료비 등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는 장애인의 의료요구 충족은 중요한 문제임
-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 지역별 최고 576배 차이

-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 평균은 115,356원으로 지난 조사대비 57,676원으로 조사되어 100.0%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 장애인 주거지원 제공사업(장애인 대상의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지원)등 수준을 비교한 주거권 보장 지원 수준 평균 예산액은 전국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지역별로 576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8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지원 예산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12)	보통(0)	양호(4)	우수(1)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대전, 경기, 충남	세종
최하 1,525원	평균 115,356원		최고 879,532원

- 세종은 최고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 879,532원을 지원했고 강원은 1,525원을 지원해 지자체 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탈시설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기 위해서는 살 수 있는 공간, 즉 주거권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하지만 조사 결과 지역별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의 차이가 극심하여 사는 지역에 따라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됨
- 거주하는 주거권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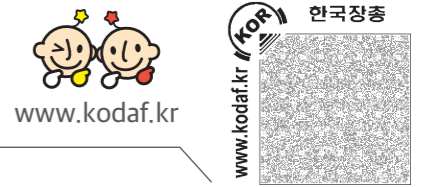
주거공간 뿐 아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노력 절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6월 대구도시공사에게 '공공주택에 장애인 피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을 할 것은 권고함



백민 기자 "장애인 피난시설 없는 공공임대주택 '차별'"
©에이블뉴스 2022-06-17

-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승강기에 점형블록 및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아 재난 상황 시 장애인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구도시공사는 '1993년 이후 증·개축이 안 되었으므로 설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사용에서 장애인이 제한·배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권고하였음
- 이처럼 장애인 주거공간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은 재난 상황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음
- 한국장총은 2022년 이종성·최혜영·장혜영 국회의원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11-30

- 토론에 참여한 권오정 교수(건국대학교 건축학과)는 "장애인들은 생활하자처리 같은 세대 관리서비스와 전문청소서비스, 편의시설 개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 서해정 센터장(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안정성(주택 입지 선정, 주거비 지원, 주택개조), 주거 편의성(주거 및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지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들은 주거권 보장,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예산 확보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직업재활시설,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3년 연속 상승

직업재활시설 확충 전국적 상승

- 취업 연령대 성인 장애인 5천명 당 설치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 2019년 9.94개, 2020년 10.02개에서 11.13개소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상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3개 지역으로 나타났음
- 대구는 7.67개소에서 11.84개소로 지난 조사대비 54.4%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음
- 세종은 19.07개로 가장 높은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6.64개소로 다소 낮은 확충수준을 보였음

표9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5천명 당 o개소)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3)	보통(7)	양호(5)	우수(2)
충남, 전북, 전남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최하 6.64개소	평균 11.13개소		최고 19.07개소

직업재활시설 확충 전국적 상승

- 취업 연령대 성인 장애인 5천명 당 설치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 2019년 9.94개, 2020년 10.02개에서 11.13개소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9년 90.00명, 2020년 94.03명 2021년



95.12명으로 3년 연속 상승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종사자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은 3년 연속 상승하였고 충북, 경북은 3년 연속 하락하여 종사자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은 지난 조사 우수수준인 134.87명에서 54.2%하락한 61.80명으로 크게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 확충을 위해 예산과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6 저상버스 도입률 충족한 곳은 2개 지역 뿐, 정보 접근 예산은 크게 감소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률 충족한 지자체는 충북, 경남 뿐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7-2021)(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목표
전국 2016년 19.0%, 2021년 42.0%
(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 2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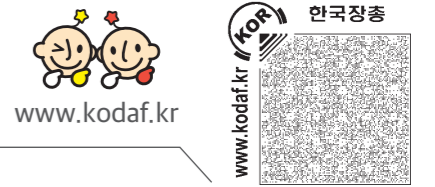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지난 조사 23.13%에서 24.6% 상승한 28.83%로 조사되었음
- 전국에서 절반이상 저상버스를 확보한 지역은 2곳으로 서울 59.66%, 충북 50.54%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1년까지 42%이상 확보(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하는 것으로 목표했지만 조사결과 약 13%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충북은 지난 조사 21.10%에서 50.54%로 상승하여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이며 저상버스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였고 서울 또한 목표율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저상버스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강원, 울산, 제주는 지난 조사대비 저상버스 확보율이 하락했고 분발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장애인 버스이용을 위한 저상버스 확보에 지자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지속적으로 하락

-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충족률은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임차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을 합산하여 산출됨
- 2018년 221.89%, 2019년 186.93%, 이번 조사에서 167.9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전이 362.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북이 97.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장애인콜택시 등은 장애인 이동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확보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24시간 가능하게 하고 운행범위를 확대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
- 운영시간 및 범위확대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예산부족과 장애인



- 콜택시 등 충족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려됨
- 전국적으로 장애인콜택시 부족현상으로 인해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음



고여정 기자, "장애인 콜택시, 3대가 나라를 구해야 배차" 절대부족 ©뉴스시스 2022-04-20

- 확대되는 운영시간, 운행범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됨

4차 산업시대에 장애인 정보접근 예산은 감소

-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은 지난 조사 26,280원에서 70.7%가 하락한 7,687원으로 조사되었음
-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PC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점자소식지,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을 조사한 지표에서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7개 지역만 상승했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크게는 -99.5%가 하락했고 90% 이상 하락한 지역도 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정보접근을 위한 지자체의 분발이 필요한

- 것으로 나타났음
- 우수지역인 제주도 지난 조사 60,999원에서 30.9%가 하락한 42,163원으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 수준이 크게 하락했음
- 전남은 지난 조사 963원에서 8,465원으로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이며 장애인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대

-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생겨났고 현재 까지도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느끼는 정보 소외감은 극심했고, 현재까지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키오스크, 간편결제 앱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간은 더욱 증가해 각 지자체는 장애인정보통신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더욱 각별히 신경써야 함
- 2025년부터 비장애인 초·중학교 코딩 교육 의무화가 결정되었고 이를 통해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의무 교육 대상에서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교(급)는 포함되지 않아 장애학생이 4차 산업시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강화 기회가 부족함
- 각 지자체는 장애인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4차 산업시대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보접근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함



03 지역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장애인 교육·복지는 차이 없어야

-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교육·복지 주요 정책 및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
-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앙장애인복지사업 62.3%, 예산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
- 지역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노렸지만 지자체별 예산 및 운영 차이로 인해 지역별로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이 달라 사는 지역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이 차이가 발생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계속해서 지역별 장애인·교육 수준 격차해소를 위해 비교·분석했음
- 단순히 비교·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자체의 관심과 개선추구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이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민선7기 지자체장의 종합평가, 남겨진 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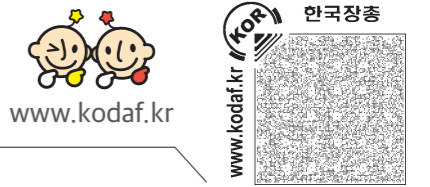
- 2022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민선7기 지자체장 종합평가를 위해 전체 지표들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교육 분야 욕구가 발생하고 다양한 지표에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함
- 장애인교육 수준은 3년 연속 상승하였지만,

지역별 격차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특수교육예산과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등은 지역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별 과제로 남겨졌음
- 장애인복지에서는 의료보장, 주거권 보장, 예산 확보, 저상버스 등에서 지역별로 큰 격차가 나타났음
- 의료보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도 높은 상태이나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저상버스 확보는 서울과 충북을 제외하고는 50%가 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서 모든 시·도가 저상버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민선8기 지자체장,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17개 시·도 지자체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음
- 연임한 지자체장과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은 민선8기로 4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음
- 민선8기 지자체장은 민선7기 지자체장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교육 수준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음
- 앞서 다뤘던 분야, 영역별 지표에서 장애인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곳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분석을 자료로 활용하여 지역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결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8명, 기초의회 비례대표 6명 등 총 14명의 장애당사자가 지방의회로 진출했으나 2018년에 비해 16명이 감소했음
- 광역 7개 시·도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장애인 복지 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2022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는 지역별 장애인 요구공약을 전달했음
- 첫째로 가장 많은 지역에서 요구한 공약은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으로 조사되었는데 부산, 충북, 경기 등에서는 여의도 이룸센터 등을 모델로 장애인종합회관을 건립하고 있고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지역 장애인의 욕구가 있으나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임
- 장애인의 욕구를 분출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둘째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은 장애인 소득 및 고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많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임
- 마지막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확충 등을 요구했음
- 저상버스가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고 특별

교통수단 충족률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지역별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수준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정책·제도를 마련해야 함

-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를 활용하여 중앙 및 지자체는 장애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산 확보와 정책·제도를 실행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함



「제29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발표된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분석' 발표 영상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분석」 자료집(PDF 형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정책뉴스' 카테고리 내 '한국장총자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함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3년 1월 27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2023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직원 일동-

